



시시각각 변하는 빛의 음악분수 2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의 분수대 '빛의 음악분수'가 시원스레 물줄기를 뿜어내고 있다. 빛의 음악분수대는 이날을 시작으로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낮 12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 9시 정각 3차례씩 운영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조선소에서 일할 때 시끄럽고 덥고 힘들죠. 그런데 '야 하지마'라면서 소리치는데 기분이 나빠요. 한국사람 대부분이 그러는 건 아니지만 외국사람한테 소리쳐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외국인은 항상 '아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여기(영암군) 교통이 가장 불편해요. 버스가 900번, 300번 2대만 있거든요. 택시비도 너무 비싸요. 목포갈 때 택시타면 2만5000원이 나와요. 교통비 너무 비싸요.

한국 교육 커리큘럼이 네팔과 너무 달라요. 내가 한국에 계속 살지 말지 지금 잘 모르잖아요. 만약 영주권 못 따면 애들은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네팔가면 적응 못할 것 같아 걱정이 많아요.

무시받고 교통 불편...교육 걱정도 영암 외국인 노동자 "떠나고 싶다"

국토연구원 '인구감소지역 외국인 이주노동자 체류실태' 보고서

영암, 전국 소멸지역 중 외국인 근로자 7403명으로 가장 많아 외국인 이주 노동자 57.4% "수도권 등 타 시·도로 이사 희망" 한국어교육 등 시급...지자체, 지역 정착 유도 방안 고민해야

'외국인 노동자를 무시하는 행태, 불편한 교통, 자녀 교육의 어려움'. 영암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밝힌 한국살이 어려움이다. 인구소멸 지역인 전남에서 내국인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지만 이들의 어려움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암은 정부가 지정한 인구소멸지역 중 전국에서 외국인근로자가 가장 많은 곳이지만, 영암지역 외국인 근로자 절반 이상은 수도권 등 타지역으로의 이사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암군은 비수도권 최초로 군청 내에 이주민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이주노동자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이들의 지역 정착을 위해서는 더욱 고민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인구감소지역 외국

인 이주노동자 체류실태와 지역정착 방안' 자료에 따르면 연구원이 만난 영암지역 이주노동자의 57.4%가 타 시·도로의 이사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밝힌 영암을 떠나고 싶은 이유는 소득과 근무지 환경 등 경제환경 때문이었다. 이들은 영암을 떠나 수도권(77.1%)과 인접지역(11.4%)으로의 이사를 희망했다. 인구감소지역 중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영암군(7403명)이었다. 뒤이어 충남 논산시(4769명), 경남 밀양시(4015명) 순이었다. 또 2018년 대비 2023년 전국 89개 지역 중 약 92.1% 지역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증가했다. 영암은 이주노동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3305명 ↑) 지역으로 꼽혔다. 특히 조선소가 위치한 삼호읍에 7000명이 넘게

거주하고 있었다. 영암내 이주노동자는 E-9비자(비전문취업)로 머무르는 경우가 3625명으로 가장 많았다. E-7(특정취업)은 1292명이었었다. 체류자격은 다르지만 이들 모두 삼호읍 조선소 내 근무자들이다. 국토연구원은 대불산단을 중심으로 제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밀집해 있어 지자체·기업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무엇보다 직장내 차별 금지 교육과 한국어 교육이 시급하다는 게 국토연구원 분석이다. 국토연구원 삼충면점에 응한 영암지역 이주노동자들이 밝힌 차별장소 1위는 일터였고, 차별의 이유를 한국어 실력 부족으로 꼽았다. 이 때문인지 응답자들은 영암군과 회사의 추가 지원 희망 서비스로 한국어를 선택했다. 국토연구원은 "영암군내 이주노동자들의 전반적인 지역사회 정착 의향은 높지만, 각 부문별 만족도는 다소 낮은 수준이며, 경제적 환경 등을 이유로 수도권 이주 의향이 높다"며 "또 직장에서의 차별 경험이 높은 편이므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전남 변호사 '탄핵 한 줄 성명' 보니

27명 참여...선고 기일 확정 전 '우리 마음도 봄을 맞이하고 싶다' 확정 후 '사사(44)로움 없이 일일(11)이 위헌 사안 검토했으니...

광주·전남 변호사들도 2일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한 줄 성명'을 냈다. 한강·은회경 소설가 등 작가 414명이 최근 세대와 장르를 떠나 '한 줄 성명'을 낸 것과 같은 방식이다.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9명이 선고 기일이 확정되지 않은 지난달 31일 제안해 27명의 변호사들이 참여했다. '우리 마음도 봄을 맞이하고 싶다'(최선국 변호사), '20년 넘게 판결만 하겠으면서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최복 변호사), '학부 교실에서 배웠던 헌법을 하루빨리 다시 만나고 싶다'(이소아 변호사), '헌법을 수호해 후세에 부끄럽지 않은 역사를

만들어 주세요'(오두일 변호사), '탄핵은 정치적 진영의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고영현 변호사) 등 성명을 낸 변호사들은 헌법재판관들의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이옥형 변호사는 "헌법재판관은 민주주의의 편에 설지, 내란의 편에 설지 결정하라. 신을사오적이 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썼다. 선고 기일이 확정된 뒤 참여한 최정희 변호사는 "헌재 재판관들이 사사(44)로움 없이 일일(11)이 위헌 사안들을 충실히 검토했으니, 4월 4일 11시에 파면 결정으로 헌정질서가 지켜지길 바란다"고 적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전남도, 단체장 없는 목포·신안 행정 지원키로

박홍률 목포시장과 박우량 신안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광주일보 3월 28일 6면) 받으면서 권한 대행 체제에 들어간 목포시와 신안군의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남도의 행정 지원이 이뤄진다. 전남도는 2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김영록 전남지사과 이상진 목포부시장, 김대인 신안부군수, 전남도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목포·신안 주요현안 간담회'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 목포의 현안으로는 남도국제미식산업 박람회,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 향토 음식진흥센터 건립 등이 거론됐고 신안에서는 흑산도 추모 공원

조성사업,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여객선·도선 공영제 등에 대한 진행 상황이 논의됐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단체장 권위로 지역 공직사회가 흔들리지 않게 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자들이 동료하지 않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안정적 분위기를 조성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박홍률 전 목포시장은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당선이 무효로 됐고 박우량 전 신안군수는 기간제 공무원 채용에 부당하게 참여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군수직을 잃었다. /김지용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2천만뷰 돌파

기농야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5년 4월호 2025년 3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스 : 062-222-0195

특집 예술 꿈나무들의 등용문 호남예술제 70주년 - 1956년 창설, 60만 명의 꿈 키워온 예술 대제전 - '글로벌 스타' 활약 호남예술제 수상자들 - 화보로 만나는 호남예술제 70년사

꽃피는섬 예술만발 섬티아고 공간의 재발견② 어뵤서어 문공서어 대학자 고통의 서원 선비정신, 전통문화 배움터로 변신

에향 초대석 이소영 식물 참모습 그리는 식물학 일러스트레이터 "결에 있는 식물과 더불어 행복해지면 좋겠어요" 에향과 함께하는 남도투어⑧ 따뜻한 봄날 당일치기 섬 여행